

# 앞으로 세대로

나를 위한 맞춤공약



Vision 0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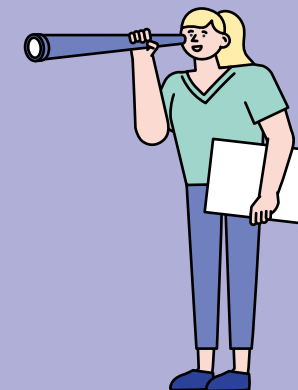
## V. 평화안보

☑ 20대 핵심 추진 과제

18. 평화번영

19. 실용외교

20. 스마트강군



## 18. 평화번영



- ☑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습니다.
- ☑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협력으로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.
- ☑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.
- ☑ 국가를 위한 헌신, 더 깊고 강하게 예우하겠습니다.
- ☑ 평화 이행시대 남북 농업교류 및 평화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.
- ☑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및 글로벌 산림 복원을 주도하겠습니다.
- ☑ 역사 왜곡과 전시 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인권과 평화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.

### 평화번영

#### 01

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를 향한  
실질적 진전을 이루겠습니다.

-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주도성 강화
  - 남북,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진전의 선순환 추진
- 신뢰조성 및 적대해소를 통한 비핵화 협상 여건 조성
  - 남북, 북미 정상간 기존 합의준중 및 남북합의 이행 체계화를 위한 국무총리실 내 '남북합의 이행 추진 점검단' 설치 등 이행 노력
  - 개성공업지구 등 민족내부 사업에 대한 유엔의 포괄적·상시적 제재면제 추진
- 스냅백(약속위반시 제재 복원)과 단계적 동시행동을 통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추진
- 다양한 비핵화 협상을 구성을 통한 비핵화 협상 진척 유도
  - 북미양자뿐만 아니라 남북미중 4자, 남북미중일러 6자 등 다양한 협상을 동시 가동 노력
-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및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
  - 상호 적대행위 중지 범위 확대 등 공정한 군비통제 합의 적극 추진
- 종전선언 추진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추진
  -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협의체 구성 추진

##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협력으로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.

### ■ 첨단산업 중심의 '한반도 평화경제 대전환' 추진

- 한반도 신경제구상2.0(에너지·자원벨트·동해권 관광, 서해권 첨단산업·교통벨트, DMZ 생태·환경벨트 조성 등), 북한 인프라 구축 협력 추진
- 4차 산업혁명·기후위기극복, 생태보호, 방역협력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남북협력 확대

### ■ 접경지역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터 '국제평화경제지대(GPEC: Global Peace Economic Cluster)' 조성

- 통일(평화)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접경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

### ■ 글로벌 공급망 남북협력 추진

- 희토류 등 광물자원 개발 관련 과학기술 교류, 남북 공동 사전조사
- 지하자원 협력 남북 당국자간 회담 재개

### ■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한 기반 조성

- 서울-평양 상주대표부 등 남북관계 제도화
- 남북경협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, 통일경제특구 설치, 교류협력 전담 기구 설치 검토, 남북경협결제시스템 구축
- 남북미간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복원,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
- 남북교류협력 법률 체계 재조정

### ■ 남북 철도/도로 연결·현대화 및 남-북-중, 남-북-러 연결 추진

- 남-북-중 고속철도 연결 대비 KTX와 SRT 등을 접경지역까지 운행하는 방안 검토
- 남북 접경지역 고속도로 신설 및 개선 추진

### ■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과 인도적 지원 추진

### ■ 농수축 산업, 경공업 등 전통산업 남북협력 추진

- 스마트 농장 시범단지 조성 및 양묘장 및 양식장 현대화 등 농수축 산업 상생협력 추진
- 북한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한 경공업 협력

##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.

### ■ 국민 공감 대북정책의 제도화

- 한반도 평화 및 통일 관련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, 정당, 정부가 참여하는 '지속가능 통일국민협약위원회' 설치
- 대북정책 수립과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 사전 브리핑
- 주요 남북합의서 국회비준동의 추진으로 남북관계의 제도적 기반 강화
- 해외협의회 활동 및 사무처 지원 조직 강화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강화

### 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남북 교류협력 권한 및 자율성 강화

- 지방정부, 민간단체의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
- 통일+센터 설치 지역 확대

### ■ 청년·미래세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

-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(한반도 청년 SUMMIT) 개최
- 남북 대학생 역사유적 탐방단 상호 교환
- 공연·체육·예술·교육 등 분야에서 남북한 청년·미래세대 교류 기회 마련
- 2024년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공동개최 추진

### ■ 청년 평화경제 활성화 추진

- 평화·통일 관련 차세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확대
- 남북협력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육성 지원
- 남북경협기업의 청년 고용 지원

### ■ 남북 문화·예술·체육 교류 활성화 및 지식공유 추진

- 남북 국회회담, 남북 도시간 자매결연, 보건의료·역사·문화·사회·학술 등 다방면 교류협력 재개
- 남북 공동의 각종 기념행사 추진 및 문화·예술 공연 상호 방문 추진
- 북한 연구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 확대
- 남북 지식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학술기반 조성 및 공동연구 추진

### ■ 이산가족 문제 우선 해결

-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 및 증설
- 신청자 전원 이산가족 상봉 추진
- 화상 상봉, 영상편지 교환 등 비대면 상봉 추진
- 이산가족 고향방문, 장묘이장, 고향장례 등 추진

### ■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인권 증진

-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추진
- 북한 주민의 경제적·사회적 여건 개선을 통한 실질적 인권증진 도모
-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공동 실현을 위한 남북 대화·협력 추진

### ■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 혁신

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획기적 개선
-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 사회통합 제고

## 국가를 위한 헌신, 더 깊고 강하게 예우하겠습니다.

-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보상 확대 추진
  -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
  - 무명의 독립유공자 적극 발굴 등
-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확대로 보상심의 접근성 제고
- 일상 속 보훈문화 기반 조성
  - 정부 기념식에 국민 참여 확대
  -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·운영 재정비
- 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신개념 예방형, 맞춤형 보훈의료체계 구축
  - 지역 연계 보훈 주치의제 도입
  -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를 위한 방문진료사업 도입 및 마음치료센터 강화
  - 공정 조달체계 구축, 전문인력 확충 등 보훈병원 혁신체계 마련
- 제대군인 지원 강화
  - 군 복무 중 다친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상기준 완화, 상이등급 미달자 지원제도 추진,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기준 개선
  - 정부·지방정부 청년지원 사업에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의무복무자 우대
  - 성폭력 피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
  - 군복무 호봉인정 의무화
- 순직 경찰관, 소방관 등에 대한 지원과 예우 강화
-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·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, 보훈대상자의 진료 접근성 확대
- 골프장 등 국가부지에 병원·요양원·임대주택·체육시설이 어우러진 보훈복지 종합타운 조성 추진 검토

## 평화 이행시대 남북 농업교류 및 평화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.

- 농산물 교류협력, 농업개발협력, 공동식량계획 등 단계별 교류 추진

##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및 글로벌 산림 복원을 주도하겠습니다.

- 산불·외래 산림병해충 방제 및 남북·동북아 협력 구축
- 북한·세계 산림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증진
-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확보

## 역사 왜곡과 전시 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인권과 평화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.

### ■ 국무총리실 산하 '1325위원회' 설치

- 안보리 1325 결의안을 기반으로 한 여성·평화·안보 정책 수립
- 남북여성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한 성평등한 한반도 실현
- 해외 개발협력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는 여성평화ODA 정책 추진

### ■ 일본군'위안부'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·종합적 추진체계 마련

- 전시 인권·성착취 문제의 역사적 재조명을 통한 정의로운 해결
- 일본군'위안부' 기록물 자료 조사·수집·관리, 연구 집적, 교육, 국제사회 연대 및 홍보

### ■ 일본군'위안부' 역사 왜곡 및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수립

### ■ 일본군'위안부'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

## 19. 실용외교



☑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.

☑ 역지력과 유연한 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질적으로  
진전시키겠습니다.

☑ 포스트코로나 시대전환에 대응할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을 선도하겠습니다.

☑ G5 국가 비전을 뒷받침할 통상과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.

☑ 청년의 국제무대 활약을 지원하고, 국민과 함께하는  
공공외교 시대를 열겠습니다.

☑ 국격에 맞는 국제개발협력을 전개하겠습니다.

☑ 포용적 재외국민·동포 정책으로 한인공동체를 강화하겠습니다.

##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.

- 미중경쟁을 국익 증진의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외교 전개
- 한미관계를 포괄적 동맹으로 강화
- 한중간 실질협력 증진 및 한반도에서 중국의 긍정적 역할 유도
- 투 트랙 기조의 실용적 한일관계 구축
  - 김대중·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발전시킨 새로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모델 추진
- 한러간 다양한 협력 잠재력의 발굴과 실현
- 주변 4강을 넘어 다양한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
  - 상호 존중과 호혜적 한·아세안 관계 지향
  - EU·영국과 경제·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
  - 호주, 인도, 중동, 중남미, 아프리카 등과 실질협력 확대

## 억지력과 유연한 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겠습니다.

- 초당적 대북정책의 틀을 마련해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질적 성과 도출
  - 단계적 동시 행동을 통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추진
  - 제재와 관여, 이익과 불이익을 유기적으로 배합하여 협상력 강화
  - 비핵화 과정과 평화과정의 시너지 있는 진행, 국제공조와 남북 대화의 상호보완적 운영
-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와 역내 군비경쟁 등 안보 불확실성 관리
  - 동맹기반의 억지력 및 한미일 안보협력 등 안보외교 강화
- 비핵·평화 진전에 따른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적 경제지원 준비
  - ‘한반도 경제, 사회문화, 생명공동체’ 위한 국제협력 건인
  - 북한의 미·일 등과의 관계 확대지지 및 세계 경제 편입 지원

## 포스트코로나 시대전환에 대응할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을 선도하겠습니다.

- 동북아 역내 포괄적 안보협력을 위한 다자협의체 추진
- 한미일, 한중일, 남북중, 남북러 등 중소규모의 다자협력네트워크 활성화
- 보건협력·문화예술·과학기술, 신안보, 공급망 등 동북아 공동과제 협력
- 동아시아 안정과 번영을 위한 ‘한반도 평화안보대화’ 추진
- 신흥안보 위협으로부터 생명안전 보장 위한 국민안심 외교

## G5 국가 비전을 뒷받침할 통상과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대외경제안보의 핵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전화 추진
  - 글로벌 공급망(GVC)과 물류망의 다변화, 안정화를 추진하고, ‘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’를 컨트롤타워로 한 경제안보정책 통할 기능 확립
  - 글로벌 공급망(GVC)과 물류망의 조기경보체제(early warning system) 구축
  - 소재·부품·장비에 중요한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정책대화 강화
- 디지털 통상 리더십 강화를 통한 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
  -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(DEPA) 가입 추진
- 신시장 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
  - 세계최대 FTA인 RCEP의 적극적 활용, 신남방·신북방·중남미·중동 등 신흥지역과의 양자 및 다자간 FTA 등 지속 확대
  - 기후변화·보건·서비스 등 신이슈들의 통상규범화 논의에 적극 참여
  - 녹색기후기금(GCF)이 명실상부한 국제적 기구로 발전하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 전개
- 해외취업·기업활동 지원 등 우리 국민들과 기업의 경제공간 확대를 위한 재외공관 역할 강화



청년의 국제무대 활약을 지원하고,  
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시대를 열겠습니다.

- 2030 젊은 세대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창의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외교환경 조성
- 청년들의 해외 경험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외교 강화
- 북방지역, 중남미, 중앙아시아,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등 K-컬처 취약지역 활성화 지원

국격에 맞는 국제개발협력을 전개하겠습니다.

- 국격에 걸맞는 국제개발협력 실현
  - 공적개발원조(ODA)예산 단계적 증액
  - ODA 전문 인력 양성
  -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구 한국 유치 추진
-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선진화
  - ODA 양자 대 다자 실행 비율 조정으로 다자기구와 협력 확대
  - 시민사회단체(CSO)의 ODA 집행 지원 확대로 청년 고용 기회 창출
- 국제개발협력을 공공외교의 자산으로 활용
  - 디지털, 혁신 등 지식공유 지원을 통한 개발협력분야 소프트파워 확산
  - 신남방 지역 등 전략지역에서 해외 ODA기관과 협력 사업 추진
- 전략적 개발협력 추진
  - 개발도상국들이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린·디지털·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협력의 전략적 추진

포용적 재외국민·동포 정책으로  
한인공동체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'재외동포기본법' 제정 및 '재외동포청' 설립 추진
- 여행객·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'해외안전대책본부' 확대 운영 및 영사조력 확대
- '세계 한민족 경제네트워크'와 국내간 연계 확대 및 '차세대 네트워크'의 정치력 신장 지원
- 재외국민의 재외선거 투표권 행사 편의 증진

## 20. 스마트강군



- ☑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강군을 건설하겠습니다.
- ☑ 북핵 및 WMD 대응 억제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.
- ☑ 우주시대를 선도하는 국방 우주전력을 확보하겠습니다.
- ☑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에 환수하겠습니다.
- ☑ 강력한 국방혁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.
- ☑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습니다.
- ☑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.
- ☑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하겠습니다.

##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강군을 건설하겠습니다.

### ■ 국방예산 효율화

- 첨단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 R&D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
- 국방·방산비리 원천 차단

### ■ 무기체계 첨단화 추진

- 유·무인 전투체계 발전과 감시·정찰 및 경계 체계의 지속 보강

### ■ 군구조 개편

- 지휘구조 단순화, 중복기능 통합 등 군구조의 합리적 개선
- 전투중심 조직으로 정비 및 비전투분야 민간영역 확대 추진
-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및 동원훈련 보상비 대폭 인상

### ■ 스마트 강군을 위한 대통령직속 민·관·군 국방혁신기구 설치

## 북핵 및 WMD 대응 억제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.

### ■ 핵위기 시 협의절차 구체화 등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추진

### ■ 북핵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첨단 억제전력 강화

- 탄도미사일 전력 고도화 및 다양한 정밀타격 능력 향상
-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확보
- 한반도 전역 24시간 상시적 감시정찰체계 조기 구축
-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추진

## 우주시대를 선도하는 국방 우주전력을 확보하겠습니다.

- 대통령직속 국가우주산업전략본부와 연계하여 국방 우주전력 강화 추진
  - 작전영역 확대 및 우주위협 증가에 대응 가능한 우주전력 확충
  - 민군 기술이전으로 우주산업 활성화
- 국가 우주방위를 전담할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
  - 육·해·공군의 우주전력 통합 활용과 우주작전 지휘통제체계 확립
  - 군 우주자산의 전문적·효율적 운용을 위한 국방우주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

##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에 환수하겠습니다.

-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 강화 및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완료

## 강력한 국방혁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.

### ■ 국방개혁 2.0 수정·보완을 통해 더욱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

- 각군 합동성에 기반한 군구조, 방위사업, 효율적 국방운영 및 책임성 있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 발굴 및 실행

### ■ 국방분야 문민화 확대

- 국방부장관 문민화
- 국방부 문민화 확대 및 방사청 문민화 직위 재조정

### ■ 학군장교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

### ■ 육·해·공군 현행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킨 준4군체제로 개편 추진

- 현행 해·강안 경계 임무 육군 전환, 상륙작전·신속대응부대 임무 수행
- 해병대사령관 직위 등 지휘관리체계 개선

##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습니다.

### ■ 국민개병제 하에 '징집병'과 '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' 중에서 택일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

- 징집병이 복무하는 기존 숙련 및 고기술 직위를 부사관과 군무원으로 대체

### ■ 간부중심 병력구조로 변화 및 인적 준비태세의 질적 강화

- 징집병 15만 명 감축,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5만 명, 군무원 5만 명 등 전문인력 증원
- 5만 명 민간위탁 확대로 국방 인력구조 혁신
- 중간간부인 소령 계급 및 부사관 정년 단계적으로 연장

### ■ 부사관 우수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충원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

- 임기제 부사관제도와 연계하여 장기복무 비율 확대
-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초급간부 육성을 위해 부사관 전문학과 확대
- 급여 이외에 퇴직 시 사회정착지원금 지급, 복무 중 야간대학·대학원 위탁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, 사회진출을 위한 경력 인증제도 확대 등

### ■ 5년간 군무원 5만 명 증원

- 다양한 민간인력 확보로 국방 행정 분야의 전문성 확보, 현역병이 수행중인 비전투 분야에 동일한 규모의 우수 민간인력 투입으로 국방역량 대폭 강화
- 군무원 모집 시 지역균형 선발 인원 확대 추진
- 경력직 군무원 채용 확대

### ■ 징집병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

- 개인의 병역부담 완화 및 국가 인력 활용 효율화를 위해 의무복무기간은 전문가 등 국민 의견 수렴 후 점진적으로 결정

##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병사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이상 지급
- 의무복무자 상해보험 등 의료보장 강화
- 2030세대의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및 공감형 복무여건 현대화 추진
  - 주기적 장병급식 실태조사 제도화, 군 식당 민간인 직고용을 통한 직영 및 민간위탁 확대
  - 생활관을 2~4인 소인실로 전면 개선
  - 수익계약 형태의 피복구매 등 경쟁계약으로 확대 및 품질 개선
  - 모든 병사에게 다양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 및 E-BOOK 포인트 등 비용 지급
  - 군복무 중 대학 취득학점 확대 및 학점인정제 참여 대학 확대를 통해 '최소 1학기 군에서 이수'가 가능하도록 제도화, 취업/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
  - 입대장병 및 가족의 교통 편의를 위해 KTX 훈련소역 설치 추진
- 간부의 신분·생애·복무주기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및 보상 체계 추진
  - 군간부에 대한 민간주택 임차지원 지역 제한 해제 추진
  - 미혼(초급) 간부에 대한 민간주택 임차지원 확대로 안정적 복무여건 마련
  - 독신 간부 숙소 통합 및 고급화로 임무 전념 여건 마련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
  - 전세자금 지원 확대,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
  - 맞춤형 복지, 출산지원금, 격오지 근무수당 등 특성에 따른 수당 및 처우 현실화
- 군무원·군인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강화
  - 격오지 군무원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관사 및 주거지원 확대
  - 육아·자녀교육, 심리상담, 취업 등 군인 가족 복지 확대
- 불공정한 군 진급체계 개선
  - 출신별로 이원화된 진급 체계 일원화
  - 선호보직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인사위원회 등 규정 정비

- 군대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및 장병 인권 보호
  -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 직속의 '성폭력 예방·대응 전담조직' 설치
  - 군 인권보호관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독립성 보장
  -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 발간 및 공개
  - 2차 가해 처벌 및 2차 피해 대응체계 강화
  - 군대 내 '성고충전문상담관' 확대 배치 및 '신고 전 지원제도' 도입

